

민주, '尹 탄핵안·내란특검·삭감예산안' 전방위 공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법사위 통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대통령 탄핵안' 오는 14일 표결
삭감예산안 등 대어 압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여당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어 압박 카드를 총동원한 시간표를 짰다. 윤 대통령 탄핵안 등 탄핵 소추안과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삭감 예산안 등을 이번주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정훈·양부남 의원 등이 9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명시한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만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

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방침을 확정해 10일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도 추진한다. 또한 한덕수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조만간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제명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데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일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최고위원회의로 전환해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계엄군에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 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혼란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말했다.

그는 "조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

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며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임석 시의원 "탄핵 표결 불참 의원, 명예시민증 박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겐 수여한 광주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광주시의원(남구1·사진)은 9일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분들 중 국회 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소속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소희(비례대표) 의원이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광주 명예시민증은 조례에 근거해 광주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



여하고 있다. 명예시민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방문 기간 동안 이동과 숙박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예시민이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며 "명예시민은 국비확보를 포함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한 자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이어가 탄핵정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는 소통창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尹, 11월 계엄 준비 의심... 정보사 '체포조' 대기 명령"

김병주 "HID 복과공작원 투입 검토" 박선원 "요원 7명, 체포TF에 파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의 최정에 요원들도 국회에 투입될 '체포조'로 준비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김용현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방첩사-특전사-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계엄 수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에 요원 선발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에 요원, 이른바 HID(복과공작원)"라고 했다.

국회 "계엄군 난입... 6600만원 물적 피해"

김·경 등 수사기관에 제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사무처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는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최정에 체포조는 비상계엄 직전인 12월 3일 저녁 9시까지 4-5일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서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집결한 장소엔 약 20명으로 조직된 최정에 체포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5시까지 대기하다가 해산했다고 한다"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 출처에 대해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핵심 요원의 믿음직한 제보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기밀을 요하는 부대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해 경기 판교 소재 정보부대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치정보 파악 임무 수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본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정치인과 유튜브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 위치추적이 안 돼 애플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브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것이며 전체 영상은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리지만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어 "국회에서 입은 인적·물적 피해상황도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사무처가 파악한 인적 피해는 녹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에 대한 유실물 습득 신고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